

의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 45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8.12.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통합방위지원[비상33820-11('96. 2. 5)] 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나, 통합방위법(법률 제5264호, '97. 1.13)이 제정 '97. 6.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능(안 제2조)

- 지역 통합방위 대비책
- 통합방위작전·훈련시 지원대책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

☐ 구성(안 제3조)

- 위원 : 50인이내
 - 구의회 의장, 지역군부대의 장
 -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
 - 사회단체의 장 및 기타 위촉하는 자

- 의장(구청장) 1명, 부의장(부구청장과 위촉직중 1명) 2명
- 임기 : 당해 직책 재임기간(단, 위촉직은 1년 - 연임가능)

□ 회의개최(안 제7조)

- 정기회의 : 분기마다 1회이상 소집
- 임시회의 : 의장 필요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 예산조치 : 1999년 예산편성 예정(추경)
- 합 의 : 필요없음

2. 검토결과

-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 1.13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97. 6. 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조례제정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 :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 통합방위대비책
 - 통합방위작전, 훈련시 대책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지원 대책등을 심의

- (안 제3조) :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안 제7조) : 회의개최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의장 필요시 소집
- (안 제9조) :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구청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사무소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되도록 함.

□ 검토의견

-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제9조제1항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1. 지역협회에 부의할 안전의 사전심의, 2. 지역협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민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문을 조례에 삽입여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 참고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에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통합방위법
 - 제1조, 제5조, 제9조, 제17조
- 통합방위법시행령
 -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관 계 법 령

통합방위법

[1997. 1. 13 法律第526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敵의 浸透·挑發이나 그 威脅에 있어서 國家總力戰의 概念에 입각하여 國家防衛要素를 統合·運用하기 위한 統合防衛對策을 수립·施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5條 (地域統合防衛協議會) ①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 特別市·廣域市·道統合防衛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되, 그 議長은 市·道知事が 된다.

②市長·郡守·區廳長 소속하에 市·郡·區統合防衛協議會를 두고, 그 議長은 市長·郡守·區廳長이 된다.

③市·道協議會와 市·郡·區統合防衛協議會(이하 “地域協議會”라 한다)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統合防衛 對備策
 2. 乙種 및 丙種事態의 宣布 또는 解除(市·道協議會의 경우에 한한다)
 3. 統合防衛作戰·訓練의 支援對策
 4. 國家防衛要素의 효율적 육성·運用 및 支援對策
 5. 기타 條例로 정하는 사항
- ④地域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

第9條 (統合防衛支援本部) ①市·道知事 소속하에 市·道統合防衛支援本部를, 市長·郡守·區廳長·邑長·面長·洞長 소속하에 市·郡·區·邑·面·洞統合防衛支援本部를 둔다.

②市·道統合防衛支援本部와 市·郡·區·邑·面·洞統合防衛支援本部(이하 “各統合防衛支援本部”라 한다)는 管轄地域別로 다음各號의 事務를 分掌한다.

1. 統合防衛作戰 및 訓練에 대한 支援計劃의 수립·施行
2. 統合防衛綜合狀況室의 設置·운영
3. 國家防衛要素의 육성·지원
4. 統合防衛 脆弱地의 住民申告體制 확립
5. 기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하는 사항

③各 統合防衛支援本部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

第17條 (脆弱地域管理) ①統合防衛本部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地域를 實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敵의 浸透 또는 隱居活動이 용이한 地域을 脆弱地域(이하 "脆弱地域"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해당 市·道知事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交通 및 通信施設이 落後되어 殊死적인 統合防衛作戰이 어려운 奧地 또는 僻地
2. 間諜 및 武裝共匪가 浸透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隱居活動이 용이한 地域
3. 敵의 低空 또는 低速航空機의 着陸이 용이한 開闢地 또는 潮水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脆弱地域에 대한 障礙物의 設置등 필요한 脆弱地域 對備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脆弱地域 對備策에 관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條例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 7 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13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등에 관한 기준) ①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한다.

④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제15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26조 (개활지·호수의 정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 또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이상, 길이 250미터이상의 규모(길이방향으로 전·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이상)
2. 개활지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이내, 좌·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이상

제27조 (취약지역)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해역·해안 및 도서로서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통합방위본부장에게 건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취약지역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8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제26조의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의 설치
 - 가. 10년생이상의 입목
 -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등의 구조물
3. 제26조의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1998. 4. 6)
[조례 제3485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울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 다. 취약지역대비책
 - 라. 통제구역 설정
 -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 3 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3. 수도방위사령관
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5. 서울지방 경찰청장
6. 국가안전기획부 제103실장
7. 서울지방 병무청장
8. 서울지방 교정청장
9. 서울지구 기무부대장
10. 서울지방 국세청장
11. 서울지방 보훈청장
12. 서울지방 철도청장
13. 서울 체신청장
14. 연합통신사 사장
15.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7.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장
18. 한국통신 서울본부장
19.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0.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2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의장, 부의장 및 위원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간사) ①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 다음 각호의 서기를 둔다.

1. 총무담당서기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서기 : 민방위과장
3. 대군담당서기 : 비상계획과장

제 5 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회에 부의할 안전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전의 심의

3. 관제행정기관 간의 분업·협업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 7 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의 등) 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민방위협의회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실·국·본부에 설치 운용한다.

③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④기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 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은 수도권방위사령부 내에 둔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圖表 1)

서울시방위지원본부 구성

